

경북지역 돼지열병 남하 방지 총력 'GPS 탑재 포획트랩' 900개 배치

서남부 9개 지자체 대상 총력 대응
야생 멧돼지 집중 수색·포획 강화
열화상 드론 활용 10개 감시탑 투입



안동시 남선면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돼지 매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가 주 원인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대응 대상지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상주, 영천, 군위)과 인접한 경북 서남부 지자체이다. 김천과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 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ASF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15일 경북 영천과 7월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어 7월7일 경북 예천의 양돈농장에서도 양성 확인됐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지난 6월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발생지역은 물론 경북 서남부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야생멧돼지의 농경지 출몰이 늘어났다"며 "농작물 수확기 이전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지자체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 감지를 통한 실시간 위치 파악을 실시한다. 또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탑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도록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미흡하

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의 이행현황도 점검한다. 수렵인 및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는 한편,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획활동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관찰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美,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방안 논의

11일 서울서 4차 환경협력위원회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서울에서 환경 부문 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관리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와 외교부와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에 근거해, 한국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FTA 환경부 문 이행을 점검한다. 한미 환경협의회(EAC)는 환경협력위원회(ECC)는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환경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한다. EAC와 ECC는 그간 연계돼 개최됐다. 1차(2013년 2월 워싱턴), 2차(2015년 11월 서울), 3차(2019년 5월 워싱턴) 등이다.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우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서울에서 환경부 문 회의를 개최한다. /뉴시스

리나라의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EAC는 양국 환경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이번 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협의회 이후의 양국 간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의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양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해수부, 8개국 해사분야 전문가 참석

해양수산부가 이달 9~11일 대전에서 '제6회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해양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2018년부터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총 8개국의 해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개발 동향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 기술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해양 디지털 기술 국제 동향 ▲참가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차세대 디지털 해도 표준 ▲국제 해양 디지털정보 플랫폼 등이다.

또 한국형 e-내비게이션 운영센터(세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울산), 현대중공업 등 주요 연구시설 및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술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해양 디지털화를 통한 해상 안전 확보, 해운 효율성 증대,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디지털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中企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카카오뱅크와 협약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홍보

근로복지공단은 8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자사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푸른씨앗'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푸른씨앗'을 반영해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양측은 향후 푸른씨앗 가입자들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약 2300만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를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제도 홍보와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함께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퇴직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속 근로자

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담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기대, 훈련교·강사 보수 교육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교육생 1만7000여명을 7월 10일 ~ 16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참여해

련생을 가르치는 교·강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기 모집으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관련 법과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교직원분야 보수교육은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해 기본역량과 교수학습 평가역량 등 5대 역량과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대금 2504만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

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 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